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사항과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로 보유하게 된 개인채무자(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추심”이란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상환촉구 또는 상환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채권추심자”란 추심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기관

나. 채권수탁추심업자(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포함한다)

다. 채권매입추심업자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채권수탁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채권에 대한 추심(채권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채무조정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금융채권

나.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여신이나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6. “채권수탁추심업자”란 제45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채권매입추심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채권매입추심업자”란 제54조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상환

다. 분할 상환

라. 상환기간 연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10. “채무조정교섭업”이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대행·지원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

나.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확인

다. 채무조정 내용의 검토·협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1. “채무조정교섭업자”란 제67조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관리·추심·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권리·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정책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개인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3장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4장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기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일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

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개인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에 따른 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8조(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채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

에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에 관한 사항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개시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개인채무자에게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경매신청 예



정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행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

2. 개인채무자에게 면제된 이자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또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개인금융채권

2. 제4장제2절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

4.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 중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5. 채권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
4. 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

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최초로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 채권금융기관이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최초로 보유했던 채권금융기관에 환매하는 경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2. 임직원이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 채권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①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관리방안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7.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16조(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이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일(이하 “소멸시효완성일”이라 한다)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사항
2. 소멸시효 완성일
3.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및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시효 이익의 포기) ① 개인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 제1절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제한 기준

제18조(개인금융채권의 추심제한)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인금융채권
2. 제4장제2절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 채권. 다만 제2호의 경우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
3. 개인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9조(추심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은 1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상황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 ① 개인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저해시키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신분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4.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5.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절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여야 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을 수탁하여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체결하

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 기간
4.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기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만,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채권만 추심할 수 있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임, 위탁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심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금융위원회에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위해서만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

제33조(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개인금융채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중 개인금융채권 외의 채권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받거나 그 양도 받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자

제34조(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제6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을 통해서만 업무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 제1절 채무조정의 기준

제35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및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채무조정의 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상환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소요 비용
3. 채권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채무조정 내부기준)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다.

## 제2절 채무조정의 절차 및 방법

제3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개인금융채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293조의3과 제242조에 따라 인가받은 간이회생계획 및 제614조에 의해 인가받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폐지되지 아니한 경우

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성립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경우

② 개인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개인채무자가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채무조정 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개인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서류로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채무조정의 거절)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3조에 따라 채무조정이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대하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개인채무자가 제41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제43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40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3.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채무조정의 합의 해제)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제5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업종

### 제1절 채권수탁추심업

제45조(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①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제46조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하거나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허가 요건)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나.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전문성을 갖추 것

4. 50억원의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 것

5.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 것. 이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제92조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임직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선임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취소 사유

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에 관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제8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 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48조(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제4호에서 같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다.

1. 국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을 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및 주식 취득 후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또는 주식 취득 후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주주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 업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하여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이용자보호기준 등)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만,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력으로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다.

④ 보호감시인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영업의 양도·양수 등 인가)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공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5조제2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
4.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5. 제52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6. 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 제2절 채권매입추심업

제54조(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 ①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은 등록 없이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다.

②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용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55조(등록요건)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는 것
4.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이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임원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총괄사용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최근 5년간 제8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제92조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9. 최근 1년간 제6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10. 그 밖에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등록증의 발급) ① 금융위원회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5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분실 또는 훼손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등록의 갱신)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55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의 3개월 전까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유효기간의 만료사실 및 등록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8조(등록부의 공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표자, 임직원 등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제54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3. 제54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임직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마목 및 바목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은 제외한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마.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사. 금융관계법령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1조(업무총괄사용인)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영업소의 매입추심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사용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영·부수업무 제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제63조(이용자보호기준 등)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64조(총자산한도 등) ①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 법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66조(영업의 폐업 신고)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营业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85조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금융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의 폐업 신고 및 등록증 반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채무조정교섭업

#### 제1관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등

제67조(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①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등록 없이 채무조정교섭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68조(등록 요건)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
2.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는 것
4. 임원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최근 5년간 제8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그 밖에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임직원의 자격요건)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람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0조(준용) 채무조정교섭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무조정교섭업자”로 본다.

1.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증 발급, 재발급 및 대여 금지: 제56조
2.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의 갱신: 제57조
3.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부 공개: 제58조
4. 채무조정교섭업 교육: 제59조
5.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신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
6.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한 또는 시정명령 : 제49조제4항
7.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50조. 다만,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8. 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제65조
9. 폐업 신고: 제66조

## 제2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수행 준칙

제71조(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자료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인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 내용 및 절차
2. 계약해지·해제 사유
3. 채무조정에 따른 개인 신용의 변동 여부
4. 제74조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3조(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1. 채무조정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에 대한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는 제1항제2호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채무조정교섭업의 수행)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직원(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6조(연체유도의 금지)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채무자에게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대리 의사표시의 제한)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명칭에 관계 없



이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리하거나 위탁 받을 수 없다.

제78조(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개인채무자의 금전·물품·재산을 보관·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제80조(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 ①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3.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4.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7.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지도·감독

제81조(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등에게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

원에게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출자 비율을 위반한 경우.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4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이 제46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6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력, 시설과 관련한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营业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경우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5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취득한 개인금융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66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처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제26조에 따른 위탁을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다.

제87조(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6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등록증의 반납,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제88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채권금융기관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에 한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32조에 따

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은 그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지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통보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90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상당한 주의로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은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제3항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각각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채무자는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0조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제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3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83조, 제85조, 제87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94조(상호) 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54조 및 제67조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8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 중 채무조정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수탁추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5.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한 자

9.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70조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한 자

6. 제70조제8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8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한 자
4.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자
5. 제76조를 위반하여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자
6. 제77조를 위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7.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8. 제8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9. 제85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0.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
11.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수탁추심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게 한 자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하게 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자
3.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8.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0.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채무조정교섭업자
11.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한 자

제102조(병과)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에 따른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자

2.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2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자
4.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자
8.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자
11. 제70조제9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7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13. 제78조를 위반하여 보관·예치한 자
1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5. 제8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81조제4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3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0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요청을 거절한 자
6.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은 자
7.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8.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9. 제79조 본문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은 자
10. 제8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로 통지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본문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자
1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73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3.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1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
6.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6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70조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제70조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70조제9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6. 제8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7. 제8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연체이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심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11조(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는 채권추심회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48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채권수탁추심업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신고한 자는 제49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



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면 제57조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대부와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겸영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7조(총자산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입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8조(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범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9조(채권매입추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를」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또는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 협회는 제7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상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 중에 “신용 정보”를 사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

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부칙 제4조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⑧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대부업등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 및 채권매입추심업자

의 건전한 발전“으로 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대부금융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대부금융협회“로 한다.

⑩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무를”로 한다.

⑪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⑫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각각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개인신용평가업 및 신용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채권추심업”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이하 “채권수탁추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를 “신용조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6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을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제1항”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



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서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2조 및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채권수탁추심업(이하 “채권수탁추심업”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채권수탁추심업

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2. 채권수탁추심업

제1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각각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MyData) · 채권추심 또는”을 “(MyData)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3조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 · 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 제2항 및 제22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5절 채권추심업을 삭제한다.

제32조제6항제1호 중 “채권추심회사가”를 “채권수탁추심업자가”로, “채권추심회사 또는”을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추심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채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채권추심회사는”을 “채권수탁추심업자는”으로, “채권추심회사 사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사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법”으로 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수탁추심업자

제47조제1항 중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를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을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MyData)·채권추심”을 “(MyData)”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⑮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금융업 및 대부업”을 “금융업·대부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으로 한다.

⑯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호 및 제10호”를 “제9호”로, “채권추심회사”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0조제5항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

⑲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 및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채권추심업”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⑳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부수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8항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

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처분 사유(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4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 제89조제1항·제2항 관련)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신청 예정일을 정한 경우
4. 제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8.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9.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11.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3조에 따라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4조에 따라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경우
14. 제15조에 따라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조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6.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17. 제19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본문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19.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2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22. 제24조에 따라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4.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
25. 제27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를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8.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29. 제30조를 위반하여 추심을 한 경우
- 31.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경우
- 32. 제33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한 경우
- 32.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33.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4. 제38조에 따라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35. 제40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36. 제4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37.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8.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고용한 경우
- 39.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 40.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4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44.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5.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46.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7.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 48.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경우
- 49.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 제6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1.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52.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3.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경우
- 54.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경우
- 55.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5.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

- 56.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경우
- 57.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7.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58. 제70조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9. 제70조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60. 제70조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1. 제70조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62. 제70조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3.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자료를 전달한 경우
- 6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65.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67. 제73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6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 69.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70.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71. 제7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3. 제76조를 위반하여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경우
- 74. 제77조를 위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 75. 제78조를 위반하여 보관·예치한 경우
- 76. 제79조 본문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은 경우
- 77.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78.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79. 제81조제4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80.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81. 제8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82. 제8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3.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84. 제85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85.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6.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87. 제8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한 경우
88. 제8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89. 제8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0. 제89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및 제2항에 따른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1.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2.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또는 명칭을 표시한 경우
93.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한 경우
94. 채권추심자가 제3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5. 그 밖에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